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들

■ 국민연금 개혁
■ 제주 영리병원 등
의료 영리화
■ 빅데이터 규제 완화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3면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2면

빅데이터 규제 완화
개인정보를 대기업 이윤에
이용케 하는 문재인 정부

2면

불법촬영
항의 운동의
쟁점과 전망

8면

스웨덴 복지국가
신화와 실상

4~6면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됐나

7면

인도네시아 쓰나미
시장경제가
만든 참사

6면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김재현

10월 3일 제주 국제복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복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시작하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투자하겠다는 외국인이 없는데도 영리병원 유치 시도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제한도 거듭 완화됐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던 영리병원은 '외국인'이라는 조건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제주 영리병원도 중국계 '싼얼병원' 불승인에 이어, 복지국제병원 1차 사업계획이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가 거의 거지로 승인했다. 국내 병원의 영리병원 우회 투자와 운영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문제가 거듭 폭로되자 이번에는 아예 사업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내 미래의료재단이 복지국제병원에 개입해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고, 미래의료재단은 경영 컨설팅을 해 준 사실(불법이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무 조사도 없이 복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할 것 없이 돈벌이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이제 적폐를 청산할 때입니다” 10월 2일 열린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도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자본들이 병원에 투자하고 이윤을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게 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식코>에서 그린 냉혹한 미국식 의료체계가 되는 것이다.

9월 16일 열린 1차 숙의토론에 참여한 도민 참여단 200명이 밝힌 입장과 질문 내용을 보면, 인색하게 잡아도 명확한 반대 의사와 부정적 의견이 과반을 이룬다. 찬성 의견은 관대하게 잡아도 3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찬성 의견은 이미 건물이다 지어졌고, 되돌리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근색한 근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와 제주

도는 이를 노리고 재빨리 병원 건설 허가를 내겠을 것이다.

그리고 참여단의 많은 이들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복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업계획서 공개 압력을 피하고 싶었는지 복지국제병원은 공론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이렇게 공론조사는 반쪽인데다 또 짊짊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3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공론조사가 이름과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비민

주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영리병원 반대 61.6퍼센트, 찬성 24.6퍼센트로 나왔다)를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비민주적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들은 진실이 아니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을 강행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복지국제병원 측을 사실상 대리하고 있다. JDC는 자체 비상대

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문서도 나왔다.” JDC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와 비대위 활동에 대해 밝히지는 않은 채 도민들에게 소송 등을 운운하며 복지국제병원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려 한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완화, 원격의료 추진,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과 맥을 같이한다.

공론조사의 불투명성, 폐쇄성, 편향성, 비민주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온다면, 제주도민이 그만큼 영리병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는 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성과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제주도는 결과를 왜곡하려는 꼼수를 부리거나 꾸물거리지 말고 즉시 영리병원을 폐기해야 한다.

찬성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가 공론조사로 환원될 수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절차상 문제가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다.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압박하는 강력한 운동을 펼쳐 1호 영리병원이 국내에 설립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잘 쓰겠다’는 그 데이터는 그동안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던 개인정보들이다. 질병, 위치, 신용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쓰는 주체는 기업이다. 이윤을 위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온 가슴기 살균제 실험 결과도 조작하고 산업재해가 생겨도 숨기기에 급급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은 기업주들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것

한 그 기업을 말이다.

예컨대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효과와 부작용 등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얼핏 효율적일 듯하지만 이는 임상시험 규제 완화와 한 세트라 추진되고 있

다.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안전 규제는 사후에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건강보험 데이터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되는 셈이다.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한쪽 문이 열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규제 완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생명 같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유행시킨 ‘맞춤형’ 상품이다. 이는 기업 이윤 맞춤형이지 환자 맞춤형이 아니다. 보험 상품은 환자들이 아니라 보험사에 유리하게 조정될 것이다. 심지어 보험사 자신이 이미 보유한 환자 정보와 결합하면 이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해 내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정부 기관에 축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를 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재인이 이를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에게 넘겨 주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든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질병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업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물론 최근 미국 등지에서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겨 주는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긴 하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기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과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규제 완화는 좌절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장호중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고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과 요구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불신이다. 가뜰이나 국민연금이 노후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데, 5년에 한 번씩 기금이 고갈된다고 난리를 치며 보험료를 인상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돕느라 수천억 원 손실을 본 일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쉬이 잊히지 않을 듯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2007년에 바뀐 제도에 따라, 소득의 9퍼센트를 보험료로 내고, 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를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다. 2007년 이전에는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돼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가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2028년까지 이를 40퍼센트까지 낮추도록 개설했다. 2008년에 50퍼센트로 낮췄고 그 뒤로는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낮추도록 해, 2018년 현재 45퍼센트다.

이조차 보험료를 40년 동안 내야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40년간 연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연금액은 자기 평균 소득의 20퍼센트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런 것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현재 고용 상황으로 보건대 이는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듯하다. 현재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30만 원도 못 받는다. 적절한 생활비나 노후에 치솟는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용돈 연금’이라는 말조차 후하게 보일 지경이다. 2015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 9000원, 1인 기준 145만 3000원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어느 모로 봐도 개혁안이 아니다. 보험료는 올리지만, 연금 인상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말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며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선택지로 제시된 안들이 모두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다. ‘더 내고 지금대로 45퍼센트를 받을지’ 아니면 ‘많이 더 내고 예정대로 40퍼센트만 받을지’ 고르라 한다.

보완책?

문재인은 여론이 나빠지자 법률에 ‘지급 보장’ 등을 명시하는 ‘보완책’을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마당에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쟁점이 아



현재의 노인들을 빈곤한 상태로 방치하는 한, 연금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니다. 600조 원을 쌓아 두고도 노인 빈곤을 방치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라도 받으려면 보험료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정부의 태도가 불신을 낳고 있다. 대체 정부가 탐욕스러운 보험업자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

문재인이 내놓은 또 다른 보완책도 불신만 가중하고 있다. 이른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노후 대책을 강화하라는 얘기다. 쥐꼬리만 한 데다 어지간한 소득만 있으면 깎이는 기초연금, 보험사들에만 이익이 되고 갈수록 형편없어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보완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못 믿겠는데 민간 보험사들에 의존하라는 얘기이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도 낮아서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 간다. 개인연금은 사실상 적금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은 한 노후 대책이 되기 어렵다.

사실 ‘다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유럽 정부들이 1970년대 이후 추진한

정책이다. 공적 연금을 삭감하고 민간 보험사들은 ‘연금 상품’ 판매로 이윤을 얻게 해 주는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이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의 참여로 곧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대표자회의, 이하 경사노위)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 자신이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논의가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최근 규제프리존 법 제정 등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경기 악화에 대응해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특별위원회

당장에 이 특별위원회의 이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후 소득보장 특위’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연금 개선이 아니라, 다른 노후소득 보

장 방안으로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에는 사용자 대표도 참여한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모든 계획에 반대하고 민간 연금 활성화를 지지한다.(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 특별위원회에 전권을 맡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아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결국 최종 논의 테이블은 국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2012년처럼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가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문재인이 약속을 깨는 일은 이제 일상다반사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안, 즉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연금은 정말로 노후 대

책이 될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자기 평균 소득의 50퍼센트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를 성취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맞선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10월 16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개혁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장이 돼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이 국가의 재정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보험료 2퍼센트포인트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복지 부담을 떠넘기는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의 핵심이다.

노동운동 내 좌파는 문재인 정부 연금 개혁의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구실을 해야 한다.



사진 조종진



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 저희의 이 시위를 우리 친구가 ...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만 한다면 ... 난민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학생들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이란 친구의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분석

마테레이노 요한손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치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치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다른 배경은 불평등과 빈곤의 급속한 증가이고, 여기에 사회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 글은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대한 신화에 도전하며 그 실정을 소개한다. 필자인 마테레이노 요한손은 스웨덴인으로 현재는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이다. 아일랜드 '사회주의 노동자 네트워크' 회원이며 사우스더블린 주의회 의원이다. 이 글은 2012년 가을 《아이리시 말스탁 리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 안의 말은 옮긴이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삽입한 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당신은 '노르딕 모델'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나라들처럼 유렵 곳곳에 빠르게 퍼지는 듯한 위기를 파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것이다. 2011년 10월 아일랜드의 진보적 경제 싱크탱크인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싱크탱크'(TASCO)는 '노르딕 모델'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주체

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명한 인사들이 스칸디나비아 방식을 어떻게 아일랜드에 들여올 수 있을지 발표했다. 노르딕 모델은 조화로운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 즉 시장의 광기를 길들일 수 있고 더 평등한 사회를 육성할 수 있는 복지 국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은 진정으로 개혁과 더 나은 사회를 바

라. 하지만 노르딕 모델은 그저 말과 미사여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아일랜드] 노동당 정부의 장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긴축 정책이 사실은 진보적 개혁인 양 사람들을 속이려 할 때 그렇다. 스웨덴 등 노르딕 모델의 실상은 흔히들 생각하는 '지상천국'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높고(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부의 40퍼센트를 통제하는 반면, 인구의 4분의 1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 자산이 전혀 없다.^[1] 놀랍게도 이 수치는 아일랜드보다 높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것이다. 2004년 스웨덴은 최고경영자들의 보수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다.^[2] 이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무상 급식, 보편적으로 [학자금] 보조금을 받는 무상 대학 교육, 20세 미만 무상 의료가 있는 한, [스웨덴 등] 복지국가가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1971년 파업 중인 광산노동자들. 전후 황금기가 끝나며 노동자 투쟁이 다시 고양됐다

자본주의의 황금기: 전후 호황

1945년에서 1973년 사이 자본주의 체제는 크게 팽창했다. 이 시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8퍼센트로 추정된다.^[3] 미국과 서유럽에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치 마르크스가 틀렸고,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 끝난 듯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했는가? 첫째,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도시들이 파괴되고 광범하게 폭격당했으므로, 서유럽 나라들은 재건돼야 했다. 국가와 사기업들이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 공장, 기계, 주택에 투자했다. 둘째, 전쟁 와중과 종전 이후에 모든 곳에서 국가 지출이 크게 늘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미국의 군비 지출은 GDP의 42퍼센트나 차지했다.^[4] 보통 공황이거나 경기 침체일 때는 투자가 둔화하는 반면, 전시 경제에서 국가가

이윤율이 매우 낮은데도 투자를 추진했다. 종전 후에도 필요한 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국가 지출이 계속됐다.

셋째, 군비 지출은 전후 시대에도 계속 많았다. 종전 후 8년이 지난 1953년에도 미국의 군비 지출은 GDP의 15퍼센트에 달했다.^[5] 냉전 시절 내내,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엄청난 돈이 군사적 목적에 계속 쓰였다. 크리스 하먼은 어떻게 군비 지출이 이윤을 저하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투자를 고정자본에서 파괴 수단 생산으로 돌림으로써 그랬던 것이다. 전쟁 와중과 종전 후의 고정자본 파괴와 결합해서, 국가 지출 증가와 상시군비경쟁은 1973년까지 지속된 호황을 만들어 냈다.

문제는 스웨덴처럼 파괴 수단 생산이나 상시군비경쟁이라는 면에서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어떻게 득을 볼 수 있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체제를 전체로서 봐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로서, 그 안에서 어떤 자본가는 득을 볼 수 있고 어떤 자본가는 파괴될 수 있다. 어떤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들이 창출한 새 시장으로부터 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므로 어떤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떨어지며 궁지에 빠진다. 전후 시기에 스웨덴은 직접 전쟁에 연루된 나라들보다 유리했다. 파괴도 없었고 재건도 없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의 잉여가치가 훨씬 더 많았다. 아래에서는 지배계급이 왜 그 여분의 이윤을 복지국가의 탄생에 쓰는 것을 지지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1985년 시민당 선거포스터 (왼쪽)와 이를 패러디한 2010년 보수당(온건당)의 선거포스터(오른쪽)

시민당은 1980년대 이래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1990년대 이후 세 차례나 보수당에 정권을 내 줬다. 보수당은 2010년 선거에서 자신들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사민당의 포스터가 여파적으로 불러낸 부유층 이미지들(양복, 담배인, 수상스키 등)로 채워진 반면 보수당 포스터는 전통적인 노동계급 이미지들(조끼와 청바지, 리트리버, 작업구구 등)를 활용한 게 인상적이다.

노동계급

아직 다루지 않은 사회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계급투쟁이다. 스웨덴 노동계급의 힘이 없었다면 복지국가는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스웨덴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 언제나 계급투쟁의 온상이었다. 1800년대 말 산업이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농촌의 가난하고 땅 없는 사람들이 산업화하는 도시로 이동했다. 19세기 동안 스웨덴에서는 여러 차례 반란과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1860년대에는 노동자 단체들이 상류 계급을 공격하며, 기근과 억압에 대응해 빵·정·공화국·자유를 요구했다.^[6] 1900년대 초 노동계급 운동과 노동조합은 힘이 커졌고 두 번의 총파업을 벌였다. 첫 번째는 선거권을 요구한 1902년이었고, 두 번째는 1909년이었다.

러시아가 매우 가까웠기에,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스웨덴 노동자들에게는 영감의 원천이었고 지배계급에게는 극도의 걱정거리였다.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스웨덴 당국은 노르웨이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이 이윤의 일부만을 지배해 얻은 산업 평화와 개혁들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에 통합시키고 노동계급이 이웃 나라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공공 보건 시스템 도입, 공공교육 도입, 노동계급을 위한 주택 100만 호 건설과 함께 '폴크헬메트'(문자 그대로는 '민중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복지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다)가 발전했다.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급속히 좋아졌고, 교육 기회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어느 정도 생겨났다.

1970년대 초 황금기가 끝나면서 계급투쟁이 귀환했다. 1971년 한 해에 일어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9만 명이었는데, 그중 1만 6000명 이상이 비공인 파업을 벌였다. 1971년 파업손실일은 80만 일을 넘겼다. 노동조합 상층 간 부들과 기업주들의 협력으로 국가에 억제되는 동안에 산업 평화는 생산성의 막대한 증가를 가능케 했다. 1968년 세계적 급진화와 이후 노동자들은 동반자 관계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에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부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당원이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산업 쟁의로 새로운 입법이 이뤄져야 했다. 고용 보호와 포괄적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운동을 잠재우려고 고안됐다. 다시 한 번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밀려 물러시아만 했지만, 새 법률은 임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압박을 줄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자본가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노동계급이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순전히 경제적인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혁명적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었다. 불행히도 국조파는 너무 작았다. 스탈린주의 정당인 좌파당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파업을 배신하고, 노동자 투쟁들이 성장하고 있던 정치 운동(공장에서 노동계급 투쟁이 벌어지던 때, 베르트스 전장에 반대하는 시위, 학생들의 점거 운동, 여성 운동이 수많은 청년을 거리와 투쟁으로 끌어들이었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만큼은 영향력이 있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 1991년부터 지금까지

1970년대의 투쟁이 1980년대에 끝나게 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영국 마거릿 대처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의 주도 하에 세계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책이 됐다. 하지만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1980년대에도 계속해서 성장했으며 조세 수익은 GDP의 51퍼센트까지 증가해 역사상 가장 높았다.^[7] 1970년대 동안 공공 부문의 팽창으로 스웨덴은 세율이 높은 경제가 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증가 등 많은 새로운 세금이 노동계급에게 부과됐지만, 법인세가 오르고 피고용인 임금의 35퍼센트만큼을 사용자 세금으로 내는 제도(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도입되면서 자본도 압박을 받았다. 이 세금은 여전히 전체 세금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스웨덴 공공부문은 1980년대에 갑축을 피했지만, 몇몇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되고 금융과 은행 부문의 규제가 완화돼 파괴적인 결과를 얻어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가 9만 명이었는데, 그중 1만 6000명 이상이 비공인 파업을 벌였다. 1971년 파업손실일은 80만 일을 넘겼다. 노동조합 상층 간 부들과 기업주들의 협력으로 국가에 억제되는 동안에 산업 평화는 생산성의 막대한 증가를 가능케 했다. 1968년 세계적 급진화와 이후 노동자들은 동반자 관계와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에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그 간부들은 대부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 당원이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산업 쟁의로 새로운 입법이 이뤄져야 했다. 고용 보호와 포괄적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운동을 잠재우려고 고안됐다. 다시 한 번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밀려 물러시아만 했지만, 새 법률은 임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압박을 줄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자본가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노동계급이 모든 요구를 성취하고 순전히 경제적인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혁명적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었다. 불행히도 국조파는 너무 작았다. 스탈린주의 정당인 좌파당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파업을 배신하고, 노동자 투쟁들이 성장하고 있던 정치 운동(공장에서 노동계급 투쟁이 벌어지던 때, 베르트스 전장에 반대하는 시위, 학생들의 점거 운동, 여성 운동이 수많은 청년을 거리와 투쟁으로 끌어들이었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만큼은 영향력이 있었다.

스웨덴 경제는 1990년대 말 회복

대안은 없다?

1994년 국민투표에서 근소하게 승리해 얻어 낸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 덕분에, 스웨덴 지배계급과 사회민주당 정부는 계속 신자유주의적 경로를 밟아 나갈 또 다른 명분을 얻었다. 공공부문과 민영화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은 지배계급과 사회민주당 정부에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자신들의 계획을 실시할 핑계를 제공했다. 2006년 우파 연립정부가 선출됐다. 1990년대 초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파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전임 사회민주당 정부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했다. 더 악랄하게 밀어붙였다. 국유 제약회사들이 매각되고 시장에 개방됐으며, 교육과 보건 분야는 민영화했고, 사회보험과 복지 제도의 변화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겼다. 법인세는 계속 낮아지고 재산세와 부동산세도 낮아졌다고 비난하며 사적 금융 투기가 낡은 경제 위기를 학교·병원·복지 등을 줄이는 데 이용했다. 오랫동안 스웨덴 지배계급은 공공부문을 줄이고 에너지와 통신 같은 많은 국유 부문을 민영화하고 싶어 했다. 위기가 좋은 핑계가 됐다. 위기는 실업에 대한 공포로 노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키는 데서도 유용했다. 1990년대 초 공공부문 일자리 9만 개가 사라졌다.^[8] 1991년 소련 붕괴도 공공부문에 대한 새로운 공격 소재가 됐다. 공산주의가 몰락했으니 '대안은 없다'는 마거릿 대처의 신조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파시즘 반대나 팔레스타인 [연대] 같은 정치적 쟁점은 가장 큰 조직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렇다.

▶ 6면으로 이어짐



스웨덴 파시스트의 거리 행진. 빈곤과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가 극우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시장경제가 만들어 낸 참사

세이디 로빈슨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9월 29일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도시 팔루와 동갈라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 수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식량, 물 공급이 부족해서 생존자들은 알아서 살아 남아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10월 1일 팔루 서부에서 사람들이 식량 운반 차량을 막아섰다.

어떤 사람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 팔루에 있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도움도 없다. 우리는 먹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큰 희생은 예방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 지진·쓰나미가 일어나 23만 명이 죽은 뒤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구형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새 경보 시스템이 도입됐더라면 대형 파도의 위험을 더 정확하게 탐지했을 것이다.

새 경보 시스템이 가동됐더라면, 쓰나미가 발생한 지 1~3분 안에 경보를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시스템은 쓰나미가 시작된 지 5~45분 사이에 경보를 내리는데, 이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데 새] 경보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들의 예산은 감축돼 왔다. 인도네시아 재정부부는 지난해까지도 해저 케이블을 구매하고 설치하기 위한 자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 결국 올해 7월에 자금 지원이 승인됐다.

그런데 지난달 열린 관계 기관 세 곳의 회의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관여해 온 재



이윤 중심 체제가 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난 관리 전문가 루이스 컴포트는 경보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가 “그냥 보류된” 상태였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9월 29일 오후 6시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런데 오후 6시 36분에 경보를 해제했다. 팔루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조류 감지기(이것이 가장 가까이 설치된 감지기다)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그랬다.

탐지

인도네시아 기상청의 라마트 트리요노는 이렇게 말했다. “팔루에는 조류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야 했고, 그에 기초해서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이 [현재의] 쓰나미 탐지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쓰나미 감지·경보 시스템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해수면에 떠 있는 부표 센서 22개가 쓰나미

발생을 사전에 경고한다.

그러나 2016년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센서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재난방지청의 수도포 푸르오 누그로호 대변인은 그 센서들이 2012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 비용이 없어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해마다 줄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55개소에 사이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전 탓에 작동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안에 남아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중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긴축을 하라는 국제 은행과 국내 부자들의 요구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2명이 소유한 부는 하위 100만 명이 소유한 부보다 크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4호 번역 차승일

부자들이야말로 약탈자다

지진과 쓰나미로 타격을 입은 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도리가 없어서 상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

경찰이 팔루에서 체포한 사람은 10월 2일 오전 현재 45명이나 된다. 경찰은 사람들에게 실탄도 발포했다.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비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보통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또 실망하고 있다. 쓰나미 피해 이후 당국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생필품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절망의 시기에 어떻게든 살려는 사람은 “약탈자”라고 불린다.

2010년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나 나라가 쑥대밭이 됐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런 낙인 찍기는 재난 상황에서 도 ‘질서’를 유지하고 사유 재산을 지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왜 이 체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체제가 친지와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일에 책임이 있는데 말이다. 사회는 그렇게 상층부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도록 조직된다. 바로 그래서 밑바닥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진정한 약탈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은행들, 현지의 부자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막대한 부를 손톱만큼이라도 가져갈 기회가 생긴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부유한 자유주의 언론은 보통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 5면에서 이어짐

결론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좌파 개혁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스 시리자와 프랑스 좌파 전선의 뿔장송이 부상하며 좌파 개혁주의 정치의 새 무대를 열었다. 전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해법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서 혁명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노르딕 모델을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대량 파괴의 산물인 자본주의 호황의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동일한 상황이 유력하게 전개되지 않는

한, 복지국가는 간단히 재현될 수 없다. 진정으로 ‘옛’ 사회민주주의나 좌파 개혁주의의 이상에 따라 국가를 개혁하고자 한 이들이 ‘건강한’ 자본주의로 돌아가기 위해 내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이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스웨덴 국가의 부가 전 세계 노동자들을 억압했던(그리고 여전히 억압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수출에 의존했다는 것도 간과돼 있다. 스웨덴 경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 시위대를 학살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스웨덴 무기를 사용한다.^[13] 복지국가에 관한 신화 중 하나는 복지국가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 덕분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노동자 투쟁

이 자본가들이 이윤 중 일부를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쓰도록 강제했고, 이조차 자본가들이 견딜 만한 충분한 이윤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했다. 현재의 수익성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 복지국가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반격이 없는 한 말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이 언제까지도 경제 붕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수출이 줄어든 것이다. 유럽연합 주변부 국가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핵심국은 그들이 그 국가들에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북유럽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혁명가들은 이전 세대가 힘들게 투쟁해서 성취한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노동계급에 대

한 모든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와 더불어, 이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로 나아가 필요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은 이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개혁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으며 노동계급에 의한 혁명적 전복

만이 위기와 억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출처 아일랜드 반자본주의 계간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 2012년 가을호
번역 김동욱

[1] B.Ericson, Den nya överklassen (Fischer & Co, 2010), p.11-12, p.313
[2] 같은 책, p.288
[3] D. Ankarloo, Valfärdsmyter (ETC Frlag, Stockholm, 2010), p.55
[4] Stephen A. Marglin, Juliet B. Schor.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Google Books. 2009-03-12 검색)
[5] http://www.usgovernmentspending.com/past_spending, (2012-08-22 검색)
[6] 같은 링크
[7] H. Blomqvist, <http://www.marxists.org/history/international/social-democracy/sweden/red-thread.htm>

[8] 같은 링크
[9] OECD and SCB (Statistiska Centralbyrån), www.ekonomifakta.se/printDiagram.aspx?pid=16031&cpslanguage=sv&from16031=&to16031=
[10] D. Ankarloo, Valfärdsmyter (ETC Frlag, Stockholm, 2010), p. 120
[11] M. Nyberg, Kapitalet.se (Ordfront, Stockholm, 2001), p.207
[12] D. Ankarloo, Valfärdsmyter (ETC Frlag, Stockholm, 2010), p. 61
[13] <http://www.ofog.org/node/1196>, (2012-08-22 검색)

위기의 베네수엘라,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준효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활품 공급량은 80.9퍼센트 줄었다. 물가 상승도 문제다. 올해 물가가 18일마다 두 배씩 오른다고 한다. 기반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 올해에만 이미 7000건의 정전이 있었고, 공공기관에도 1주일에 3~4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

경제 불안과 함께 정치·사회 불안도 커졌다. 범죄율이 세계 2위로 치솟았다. 그나마도 (한 해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대규모 소요 사태, 우파의 군부대 습격, 대통령 암살 기도 등 정치적 범죄는 통계에서 제외했는데도 그렇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 비극을 자기네 목적에 맞게 이용하느라 여념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9월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때문에 산유국

이 파산하고 국민들이 가난해졌다”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한층 수렁으로 밀어넣을 “추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며칠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베네수엘라인들이 [현 정부에 맞서] 한마디 하게 할 ... 일련의 행동”을 미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데타를 암시하는 발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집권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역대 미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군사 행동(파나마 등), 경제 제재(쿠바 등), 쿠데타 획책(칠레와 온두라스 등) 등을 벌였다. 미국은 늘 “민주주의와 번영”을 말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민중은 학살, 빈곤, 독재를 겪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과 우파가 의도적 폭거 현상 조장 등으로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

그럼에도, 차베스 때부터 추구된 전략의 문제도 있다. 좌파 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것이 오히려 중심 문제이다.



차베스의 개혁은 한때 전세계 좌파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2012년 6월 거리 행진 중인 차베스

도중에 멈춘 “21세기 사회주의”

1980년대 외채 위기가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다. 세계은행과 IMF가 요구한 복지 삭감, 구조조정, 사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대륙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빠졌다. 15퍼센트가 극빈층으로 내몰렸다. 반면 자본가들은 돈을 갈취로 굶어모았다. 불평등이 극심해졌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이에 항의하는 대중 투쟁이 벌어졌다.

1989년 2월 베네수엘라를 달군 ‘카라카소’는 이런 대중 항의의 정점이었다. ‘카라카소’는 국내 유가와 그에 연동된 대중교통 요금)가 하루밤새 갑절로 뛰며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앞장선 대규모 항의 운동이었다.

‘카라카소’의 분노를 대변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킨(그러나 실패한) 좌파 청년 장교 우고 차베스였다. 차베스는 1998년 중도파와 좌파를 아우르는 선거연합을 결성해 대권을 잡았다.

차베스는 ‘볼리바르식 혁명’을 공약했지만 개혁이 부딪히는 본질적인 한계로 실제 정책은 온건했다. 집권한 차베스의 슬로건은 “가능한 한 많은 시장, 필요한 만큼 충분한 국가개입”이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지배자들은 차베스의 온건 개혁조차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2002년 4월 우파 군 장교들이 차베스를 납치해 감금하고, 한 기업인이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 차베스의 개혁 조처들을 백지화하려 했다. 쿠데타였다.

대다수가 빈민인 수십만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 거대한 항의 운동에 밀린 우파는 사흘 만에 쿠데타를 접었다.

같은 해 말 자본가들은 직장 폐쇄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압박했다. 차베스에 대한 압박과 도전이었다.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했다.

노동자 대중의 힘으로 차베스는 기사화 생했고, 우파는 기세를 잃었다. 차베스 자신도 좌경화했다. 여느 개혁주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면모였다.

이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했다. 전 세계 좌파들이 큰 영감을 얻었다. 차베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와 그의 이라크 침공을 맹비난했다. 전 세계 반전운동은 고무됐다.

차베스의 좌파적 개혁주의 전략

차베스는 국내에서는 석유 수출 수익에 기대어 운영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 ‘미션’을 발족했다. ‘미션’은 베네수엘라 인구의 절반에 이르던 빈곤층의 삶을 약간 개선했다. 의료·교육·주택 등에서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 (‘미션’에 관해서는 본지 30호의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교착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 혁명’을 참고하시오.)

그러나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국가를 이용해 위로부터 개혁을 이루겠다는 전략에 기초한 것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여러 난점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차베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에 도전하지 않았다. 차베스는 ‘미션’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고수익을 여전히 보장했다. 전체 경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차베스의 국유화 조처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유상으로 보

상하며 인수하는 수준에 그쳤다.

차베스와 국가 기구의 관계도 문제적이었다. 차베스 집권 시기에 국가 관료의 규모는 네 배로 늘었는데, 그중에는 부패한 기회주의자들이 많았다. ‘볼리바르계스’(볼리바르식 혁명으로 탄생한 부르주아들)라는 신조어가 생길 지경이었다.

차베스는 빈민과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노동자와는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차베스는 노동자들이 기존의 어용 노총에 맞서 전국노조연합(UNT)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했다. 하지만 석유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늘리자는 요구를 적극 가로막았고, 때로는 노조의 단체교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차베스가 2006년 창립한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차베스의 그런 전략을 잘 표현하는 당이었다. 이 당의 당원은 6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전혀 노동자 대중의 정당아 아니었다. 차베스의 정책을 아래로 전달하는 상명하달식에 국가 관료와 기회주의자들이 득한 관료적 중앙집권 정당이었다.

모순의 표출

유가 하락으로 개혁의 재원이 부족해지자, 차베스의 전략이 내포하고 있던 모순이 드러났다.

전체 수출의 95퍼센트에 이르는 석유 수출 수익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정체 상태로 빠져들었다. ‘미션’은 가장 활발히 운영될 때조차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25퍼센트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힘들어졌다. 빈곤율이 이전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급격히 심해진 경제 위기 때문에, 민



비극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을 찾는 어린이

간 자본가들의 수익성과 경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개혁을 제공하려던 좌파적 개혁주의 전략이 벽에 부딪힌 것이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후 후임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요구하면서, 우파와 자본가들에게는 ‘현실적’인 타협책을 제시하려 애썼다. 마두로 정부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을 부정하고 파업과 점거를 중단시켰다.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혁명을 절반만 성공시키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한 지도자 생쥐스트(1794년 사망)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차베스는 대중 운동의 분출에 힘입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지만, 노동자 대중을 국가를 통한 개혁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려다 개혁의 동력 자체를 잃게 됐다.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흔히 보듯이 노동계급의 조건을 공격하는 ‘노동자·서민의 정부’로 귀결된 것이다.

‘21세기 사회주의’, 즉 ‘볼리바르식 혁명’은 반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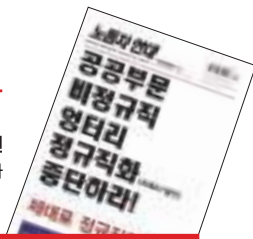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봤듯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끔찍한 수렁에 빠져 있다. 이미 IMF는 베네수엘라의 2018년 물가 인상율이 100만 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식량 부족 때문에 베네수엘라인 1인당 평균 체중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8퍼센트가 줄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도 마두로 정부는 580억 달러(한화로 약 64조 원)에 이르는 외채는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 그럴 재원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우파의 거짓말과 달리) 노동자와 서민의 아래로부터의 힘과 투쟁을 더 고무하고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즉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다가 스스로 밧에 빠진 잘못된 전략 때문에 오늘의 파국에 직면해 있다. 좌파는 이 경험에서 배워 혁명적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건설될 수 없다. 그 정의 상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므로 그것은 아래로부터 건설되어야 한다. 이것은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가 가지 않은 길이다.

※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5차 집회 맞이하는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정진희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달 만에 열린다. 그동안 주최 측이 운동 방향을 두고 고심한 듯하다. 8월 4일 4차 광화문 집회 직후부터 내부 논쟁이 벌어져 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8월 13일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인 위마드 회원 실형 판결과 주로 관계 있는 듯하다. 하지만 8월 30일, 민주당 의원 진선미가 여가부 장관에 내정됐다는 발표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을 것이다.

주최 측이 5차 집회에서 ‘편파판결’을 부각하려는 데는 우선 위마드 회원 실형 판결에 항의하는 성격이 짙다. 이 판결은 주최 측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운동에 참가한 다른 여성들도 이 판결이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에 항의해 온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며 분노했다. 위마드 회원 실형 판결에 이어 안희정 무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사법 불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커졌다. 위마드 회원의 실형 판결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맞다. 불법촬영물을 1회 유포한 초범이 1심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운동과 거리를 뒀던 주류 여성단체들도 이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물론 위마드 회원 실형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그 여성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상당수 위마드 회원들은 ‘홍본좌(구속된 위마드 회원을 가리킴) 무죄를 외치며 이 구호를 운동의 공식 요구로 삼으려 했지만, 운동 지지자 다수가 분명하게 이런 생각일 수는 없다.

논쟁

4차 집회 뒤 초강경파들은 이 집회가 “실패했다”며 주최 측을 맹비난했다. 4차 집회가 홍대 ‘몰카’ 사건 1심 판결 전 마지막 집회였는데, ‘온건한’ 집회를 해서 시위가 무기력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판은 주최 측이 위마드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4차 집회가 실패했다는 평가는 부정확하다. 그 집회는 이 운동이 일어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주최 측 추산 7만 명보다는 명백히 작은 규모였을지라도 말이다). 만약 4차 집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 운동을 간단히 무시해 버렸을 것이다. 3차 집회 뒤 언론들과 친문 인사들이 마녀사냥을 했음에도 문제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운동은 젊은 여성들의 활력과 투지가 돋보인다

인 정부는 몇몇 양보책을 내놓아야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 여가부 예산 증액, 불법 촬영·유포 관련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4차 집회가 실패했다는 평가는 흔히 위마드의 영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결부됐다. 그런 사람들은 위마드에 대한 언론들의 호들갑을 언론이 위마드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 위마드를 끔찍하게 묘사한 것은 뺑뚱기와 침소봉대를 통해 이 운동을 마녀사냥해 약화키려는 것이지, 위마드를 정말로 무서워해서가 아니었다.

시위대 일부가 사용하는 과격한 표현이 이 운동의 힘을 보여 준다는 생각은 이처럼 말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본주의적 언론의 성격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관련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힘은 그렇게 미약하지 않다.

운동의 강점

물론 이 운동은 진정한 강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위마드 식 표현이 아니라 운동 지지자들의 폭넓음과 활력, 투쟁성(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리지 않고 거침 없이 비판하는)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페미니즘에 실망하는 젊은 여성들이 대거 지지를 제공해 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리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매우 광범한 지지를 받은 것은 전반적인 정세와 더 폭넓은 여성 차별 문제 때문이었다.

여성 대다수의 분노와 투쟁할 자신감이 컸기에 이 운동은 5~8월까지 계속 성장하며 한국 여성운동의 신기록

을 갱신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커가면서 지지가 늘어났지만 이 운동 조직자들의 분리주의적 정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도 커져 왔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친문 인사들과 언론들이 3차 집회 뒤 이 운동을 마녀사냥한 것이다. 사실, 3차 집회 뒤 주최 측은 초강경 분리주의가 낳는 역효과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주최 측은 위마드가 아니라 공식 선언했고, 4차 집회에서는 “원색적인 비난과 심한 조롱”이 담긴 팻말을 규제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위마드 식 거친 표현의 자제를 요청한 셈이다.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위마드가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고 주최 측 내에서도 위마드 회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따라서 주최 측이 위마드와의 관련성을 공식 부인하는 방침은 내부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주최 측이 위마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도 분리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이 점은 이 운동의 결속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주최 측이 여가부 측과 만난 뒤 ‘온건해진 것 아니냐고 4차 집회 직후 강경파들이 의심했던 데는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주최 측이 3차 집회 뒤 여가부 측과 만나고서도 그 만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운동의 성장에 이롭지 않다. 운동 참가자들은 5차 집회가 광화문에서 다시 혜화역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궁금할 것이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이 결정이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집회 장소가 다시 혜화역 근처로 된 것이 혹시 진선

미 장관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온건해진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항의운동은 어디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운동은 올해 일어난 여성운동 중 단연 가장 두드러진 운동이다. 연성 아니키즘 성향의 젊은 여성들이 기존 여성운동 밖에서 일으킨 이 운동은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최초의 대중 운동이다.

이 운동의 적극적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법하다. 이 운동으로 그동안 수사당국이 무시해 온 불법촬영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여성을 모욕하는 범죄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들의 행태 등을 고발했다.

5차 집회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가할 것 같지만, 4차 집회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듯하다. 진선미의 입각과 정부의 불법촬영 처벌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은 어떤 계기를 얻으면 다시 성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쟁점 운동(광범한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를 깔고 있지만 불법촬영, 편파수사라는 단일 쟁점의 항의운동이다)은 지속 기간이 길지 않다. 대중의 분노와 싸울 자신감이 클 경우 단일쟁점 운동은 매우 빠르게 타올랐다가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협소함과 정치적 전망 부재로 확장성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지배자들이 그 운동을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양보나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 스멀스멀 동력이 분산되게 된다.

5차 집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여러 발표를 했다. 진선미가 9월 27일

여가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최우선 해결, 여성 고위직 비율 향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약속했다. 같은 날 경찰청장 민갑룡은 20만이 참가한 ‘웹하드 카르텔’ 수사 청원에 답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실적을 설명하면서 적극 수사를 거듭 약속했다. 10월 1일 법무부는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관련자의 재산 몰수 확대 법 개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들이 어느 수준으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알량한 성평등 공약조차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대중 운동이 부상하면 그 운동이 신뢰하는 극소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거나 수용하는 척하면서 운동을 포섭하려 한다.

따라서 불법촬영 등에 항의하는 여성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계속 매우 제한적인 쟁점을 놓고 그것도 항의하는 방식에 머문다면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장차 여성 차별 일반에 항의하는 더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리주의(남성 배척) 외에도 이 운동에서 통용되는 ‘남성 권력’ 개념의 약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계급적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무시하는 개념이다.

4차 집회에서 사회자는 “모든 여성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고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성 고수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운동은 실현 불가능하다. 여성이 체계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계급적 격차가 매우 크고 계급에 따라 차별과 천대의 정도와 온도도 다르다.

이 운동 참가자의 다수(전부는 아니지만)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이들 여성들의 투지와 활력은 자본주의(남성이 아니라)를 적대하는 운동과 연결되는 것이 앞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낙태 합법화, 성별 임금격차 축소, 복지 확대 등과 같이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구들을 제기하는 더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성차별 반대 투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함께 참가합시다!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일시: 10월 6일(토) 오후 3시~6시 40분
장소: 혜화역 1번 출구
주최: '불편한 용기'